

「희망서울,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한,

2012 주요업무계획

2012. 2. 22

감 사 관

목 차

I .	일 반 현 황	1
II .	정 책 목 표	4
III .	2011 주요 추진실적	5
IV .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10
	1. 부패근절 종합대책 적극 추진	10
	○ 서울시 공직자의 윤리생활백과 제작	11
	○ 반부패 정보 포털 구축·운영	12
	○ 감사시스템 개혁 추진	13
	○ 감사관 내부혁신 추진	14
	○ 통일적 감사원칙 및 감사매뉴얼 제작	15
	○ 청렴대책 지속 추진	16
	2. 시민참여 감사 확대	18
	○ 시민참여 옴부즈만 제도 도입	19
	○ 시민감사관 권한 및 독립성 강화	20
	○ 시민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21
	3.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22
	○ 취약분야 집중감사 실시	23
	○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5
	○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심사 강화	26
	4. 시민 고충민원 적극 해소	27
	○ 고충민원 및 생활불편 신고민원 처리 철저	28
	○ 시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감사	29
	5. 안전사고 및 재난대책의 실효성 제고	30
	○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안전감사	31
	○ 수해·폭설 등 재해 및 시민이용시설 예방점검	32

I.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조직 4담당관 23팀



인력

(’12. 2. 13 현재)

직 급	총 계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하도급개선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142	144	61	57	33	39	36	36	12	12

기 능

감사담당관

-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감사
-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추진
-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 도시시설물 안전 감사

조사담당관

- 공직자 비리 및 주요 사건 조사·처리
- 시정 각 분야별 현안사항 확인·점검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민원조사담당관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제도 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 운영
- 시민생활불편민원 조정 및 지도감독

하도급개선담당관

-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
- 하도급 개선대책 이행실태 점검
- 불법하도급 민원사항 조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

감사 및 조사대상

-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 사업소(73), 시금고, 시비보조단체(9), 투자·출연기관(16), 민간위탁시설(182),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 등
- 감사주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1항)
 -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2년, 지방공기업 및 자치구 3년

2012 예산 현황

..... 총1,412,64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사 업 명)	2012년도	2011년도	증 · 감
합 계	1,412,641	1,267,859	114,782
사 업 예 산	824,203	764,653	96,878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8,000	28,000	0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104,455	108,400	△3,945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3,200	5,300	△2,100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지원	208,600	126,450	82,150
청렴시책 평가 · 시상	51,000	51,000	0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74,400	74,400	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74,320	28,000	46,32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92,630	86,839	5,791
기강감찰 운영	53,023	99,330	△46,307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44,840	44,840	0
민원조정 · 중재제도 운영	27,900	25,200	2,700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6,803	29,094	△22,29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57,600	57,800	△200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34,760	0	34,760
일 반 예 산	551,110	503,206	47,904
기 본 경 비	551,110	503,206	47,904

II . 정책목표



Ⅲ. 2011년 주요 추진실적

1. 주요 운영 성과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 처벌 강화

- 단한번의 비리로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市,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이어 복지관 등 보조금 지원시설(153개소)에도 확대
 - ※ ‘11년 : 13명(파면 9, 해임 4) ※ 본청 2, 사업소 1, 자치구 5, 투자출연기관 5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9명, 9,572만원 부과(본청 3, 자치구 6)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 연 1회 총액과 건수만 공개하던 업무추진비를 2011.7.1부터 단계적으로 매월 市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인원)
 - 본청지원부서(7.1) → 본청 전부서(10.1) → 사업소(12.1)
- 간부공무원(4급 이상 293명)의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성 등에 대해 상하급자 설문조사 및 준법성 평가 후 인사참고자료로 활용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재산등록 대상 5,964명의 등록재산 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심사하여 3명 과태료 부과 요구 및 781명 경고·시정 등 조치
- 위원 증원(9명→11명) 및 분과위원회 신설 등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
 - 임의취업한 퇴직자 5명 주의촉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포함) 및 퇴직 후 유관업체에 부당 취업한 사실을 적발하여 퇴직조치

□ 시민 고충민원 처리 및 생활불편사항 해소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 49,880건을 접수하여 비리소지 등이 있는 263건을 직접조사 후 241건 시정 및 61명 문책
 - 단순 또는 경미한 민원 49,617건은 담당부서 및 자치구 등 이송 처리
- 120다산콜센터에 신고된 도로파손 등 시민생활 불편민원 458,706건의 시정 여부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 실시로 시민만족도 제고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으로 시민권의 보호

- 시민(주민)감사청구 20건 중 한남뉴타운관련 사항 등 6건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 및 관련자 5명 문책(절차 진행 중 5, 각하 3, 취하 6)
- 청렴계약 감시활동(137회)으로 대형공사계약 등 비리소지를 차단하고, 상수도 위치정보시스템 개선사업(848억원) 입찰담합에 대해 직권조사 후 사업자 공정위 제소하고 관련자 징계 등 3명 문책

□ 하도급관련 조례 제정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 토대 마련

- 대금 미지급, 불공정계약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개선담당관」을 설치('11.1.1)하고,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11.10.12)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대금 미지급 등 접수된 민원 151건 중 27억원 139건 해결
- 하도급 실태 현장을 점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등 351건 시정

2. 주요 감사성과

□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비리의 근원적 제거

- 업무추진비(6.7백만원)를 사적 사용한 본청 간부(4급) 및 광고선전비(94백만원)를 접대비로 부당 집행한 투자·출연기관 간부 등을 적발하여 59백만원 환수 및 1명 해임 등 23명 문책
- 소방, 위생분야 등 청렴도가 낮은 4개 기관·부서 집중감사로 소방완비 증명 부정 발급 등 위법·부당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및 121명 문책

□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 조사

- 한강 요트마리나사업 시행업체에서 고가의 회원권을 편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회원권 판매금지 등 협약을 준수토록 시정 조치
- 서울메트로에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등으로 하여금 고객으로 위장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8명 문책
- 市 본청 직원이 파리 등에 해외 출장 시 초청자가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무국외훈련여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직무관련 업체에 여행경비를 일부 부담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3명 문책

□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투자·출연기관 등 감사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승진정원을 초과하여 특정인을 부당하게 승진시키고 임직원 급여 편법인상 및 예산의 사적사용 등 위법·부당사항을 적출하여 790백만원 환수 및 관련자 44명 문책

-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직제에도 없는 상임부회장 부당운영, 체육회 간부 아들을 선수로 선발 등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659백만원 환수 및 관련자 19명 문책
 - 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부여된 임무나 실적이 없는 상임고문에게 고문료와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사장 연고지 출연 프로그램 제작비 및 협찬비 부당집행 등 위법·부당사례를 적출하여 19백만원 환수 및 관련자 9명 문책
 - 서울의료원은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수당 지급이 부당하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직무수당을 계속 지급한 회계관련 직원 4명에 대해 122백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훈계 및 개선조치
 - 38세금징수과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입징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기능직 과다 운용, 근무시간 중 음주 등 전임계약직 복무위반 사례 등을 적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 조치, 부당하게 지급된 포상금은 반납토록 하였으며 관련자 2명 문책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서는 삭감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부당 확보한 사항과 추가공사와 관련한 보고 및 승인 부적정 사실을 확인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조치 및 관련자 4명 문책
- ※ 부적정한 설계로 추가공사비 원인을 제공한 용역업자에게는 벌점부과

□ 지방세·부담금 등 부과징수실태 집중 조사

- 과점주주 중과세 누락 등 지방세관련 집중 감사를 통해 탈루세원 33건 643백만원 환수 및 관련자 15명 문책
-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각종 부담금 미부과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미부과된 취·등록세 172건, 부담금 276건 등 총 1,363건을 적출하고 17,612백만원을 부과·징수조치

□ 공사 및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로 예산낭비 방지

- 공사원가 계산시 합판거푸집 단가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중복 적용하여 공사비 78백만원을 낭비하는 등 시설공사 감사결과 총 660백만원 환수(감액) 및 관련자 125명 문책
-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발파암을 매각처분하지 않고 사토하는 것으로 운반비 142백만원을 부당 반영하는 등 공사장 안전 감사결과 총 296백만원 감액(환수) 및 관련자 10명 문책
-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청소년 수련관 운영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시비보조시설 감사결과 총 103백만원 환수 및 관련자 28명 문책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부패근절 종합대책 적극 추진

① 서울시 공직자의 윤리생활백과 제작

② 반부패 정보 포털 구축·운영

③ 감사시스템 개혁 추진

④ 감사관 내부혁신 추진

⑤ 통일적 감사원칙 및 감사매뉴얼 제작

⑥ 청렴대책 지속 추진

1 서울시 공직자의 윤리생활백과 제작

- ◆ 전국 최초, 현대판 목민심서 제작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 ◆ 서울시 전 공직자의 새로운 각오와 비리척결 의지를 표현

□ 추진배경

- 공직부패·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필요
- 공직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 세세한 윤리적 대처기준 마련 요구

□ 추진계획

- 서울시 공직자의 윤리생활백과 제작

분야·상황·대상별 체계화된 윤리규범을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구성

- 법률에 정할 수 없는 공직 임용시 부터 퇴직 이후까지 공직자의 모든 행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세한 윤리기준 집대성
-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해 상황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I. 임용순간, 새내기 공직자가 지켜야할 모든 것

1. 서울시 공무원의 기본자세 등

II. '출근에서 퇴근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

1. 예산을 집행할 때(계약, 업무추진비 등)
2. 민원인을 만났을 때
3. 출장을 나갔을 때(관내외, 연찬회, 워크숍 등)
4. 국외훈련지 및 파견지에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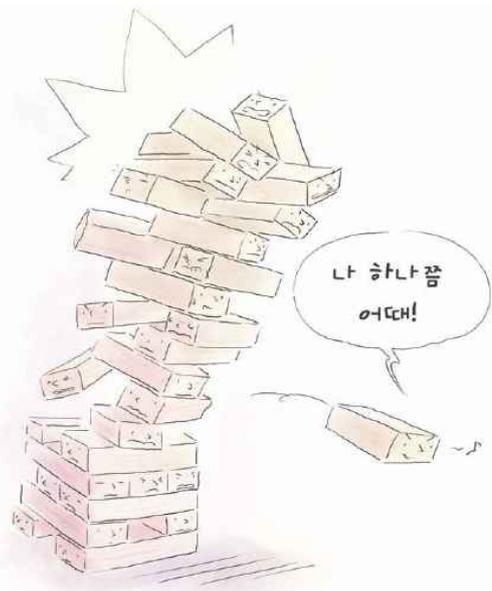
III. 퇴근 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

1. 회식 때 지켜야할 에티켓
2.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모임(골프, 여행 등)

IV. 퇴직 후, 자랑스러운 서울시 공직자로 남기 위한 모든 것

1. 퇴직 후 청탁 등 부당한 압력 행사 금지 등...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가 바로 원인이다."



2 반부패 정보 포털 구축·운영

- ◆ 공개-감시-참여가 일원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부패 정보포털 구축
- ◆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정관련 정보 공개 확대

□ 추진배경

-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부정부패 감시체계 구축 필요
- 부패사례, 감사결과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추진계획

- 반부패 정보 포털 구축 - '원순씨의 특별한 감사이야기'
 - 부패사례,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 감사관련 정보 적극 공개
- 공직비리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
 - 누구나 실시간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대표 비리신고센터」 운영
 - 기존 비리신고센터, 감사관 Hot-Line(내부고발), 클린신고센터 통합운영
 - 시장만 볼 수 있는 (가칭)“원순씨에게 전하는 비밀이야기” 운영
 - 서울시 산하 모든 직원이 시장에게 직접 내부비리 제보 가능
 - 포털에 비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최고 20억원) 및 지급결과 홍보 등으로 비리신고 활성화 유도
- 시민의 온라인 광장 조성
 - 반부패관련 정책제안 접수, 토론, 비판 등 정책공유의 장 마련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정감시를 할 수 있도록 동아리방 구성

3 감사시스템 개혁·추진

- ◆ 사후적발이 아닌 비리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감사체제 구축
- ◆ 일상감사 강화, 온라인 감사기법 확대 등 감사체제 혁신

□ 추진배경

-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위주의 시스템 감사로 전환 필요
- 감사를 통한 부조리의 원인 제거 및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

□ 추진계획

- 시스템 감사를 통해 문제의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체제 구축
 - 비리발생분야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대안 제시
 - 비리적발시 해당기관 뿐 아니라 전체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 부조리 원인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
 - 개별적인 비위 처벌 뿐 아니라 비위발생 원인이 되는 제도개선 병행
- 온라인 감사기법 확대·실시
 - 실지감사에서 전자문서 등 정보 접근을 통한 감사 확대
 - 감사대상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디지털 기반 감사체제 구축
- 감사매뉴얼 및 감사사례집을 제작·활용하여 전반적인 감사품질 제고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부패취약분야 및 무사안일 공직자 감사 강화
 - 감사2담당관 신설로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등 중점 감사
 - ※ 17개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교부단체 전담부서 마련
-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자체감사부서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4 감사관 내부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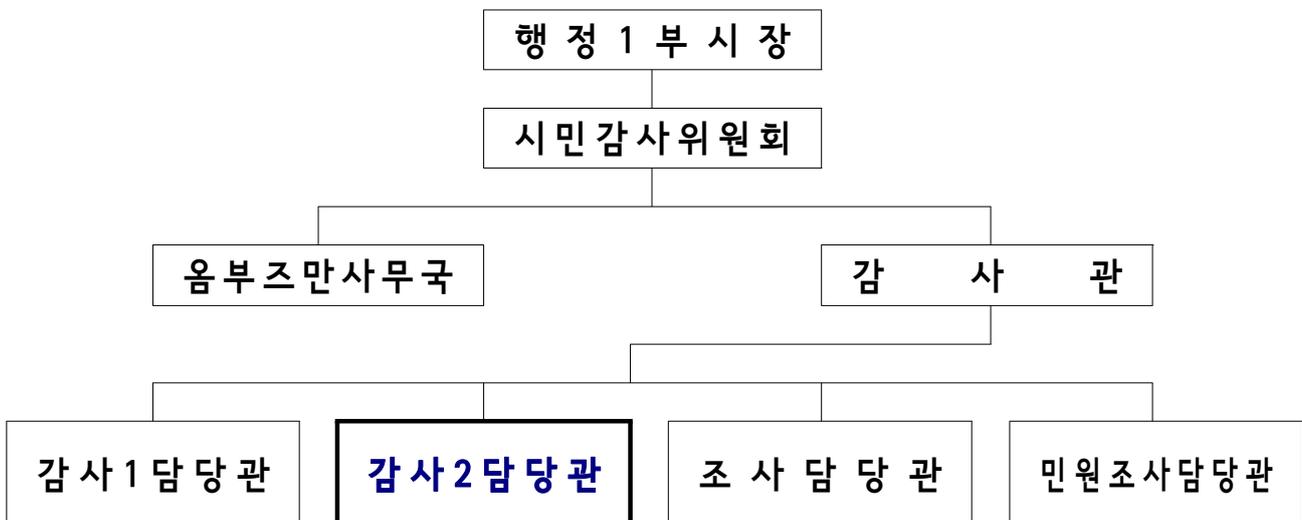
- ◆ 기존 청렴도 평가 중심에서 실질적 비리척결 중심으로 감사관 기능 전환
- ◆ 감사와 무관한 분야는 타부서로 이관 및 감사 인력 확충

□ 추진배경

- 감사·조사기능 중심으로 감사관 조직 개편 필요
- 감사요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교부단체 전담 감사부서 신설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기능 강화
 - 투자·출연기관 감사실시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하도급 등 감사와 무관한 분야는 타 실·국으로 이관하여 순수 감사인력 확충
- 우수 감사직원은 시장과 장기근무계약 체결로 장기간 근무 보장
- 우수직원 가점제 도입 및 직원공모제 실시 등 역량 있는 감사인력 유치
- 감사실적 정기평가 및 감사실명제 도입으로 감사품질 제고



5 통일적 감사원칙 및 감사매뉴얼 제작

- ◆ 서울시 숏기관의 감사품질 제고 위해 통일적 감사원칙 및 감사매뉴얼 마련
- ◆ 투자·출연기관 등 자체감사부서 개혁을 통한 감사기능 강화

□ 추진배경

- 감사관실이 서울시 전체 감사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요구
- 감사부서간 적극적인 소통 및 교류를 통한 감사역량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기관별 자체 감사부서 운영기준 표준화
 - 필수 감사대상 : 기관별 예산·회계 등 취약분야 상시 감사 등
- 분야별 세부 감사매뉴얼 제작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감사계획 수립 : 사전준비, 예비조사, 준비회의 등
 - 실지 감사 : 감사 증거수집 및 분석·평가기법 등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적출사항 처리절차 및 후속조치 등
- 감사결과를 분야별, 사례별 등으로 분류하여 감사사례집 및 체크리스트 마련
 -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부패방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향후 기관별 자체감사시 참고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 등
- 감사부서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 시와 자치구간 감사협의체 구성 운영
 - 시 본청과의 합동감사 및 자치구간(투자·출연기관간) 교차감사 실시
 - 감사기관 활동역량 평가 :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부진기관 디센티브 조치

6 청렴대책 지속 추진

-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기존 반부패 청렴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
- ◆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청렴도 최상위권 안정적 정착」 실현

□ 추진배경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기존 청렴대책 지속 추진
-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실천하는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시설에까지 One-Strike Out제 정착으로 부패유인동기 차단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이어 보조금 지원 시설(153개소)에 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시행
- 금품수수·횡령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 시행
- 간부공무원(300여명) 청렴도 평가로 솔선수범 및 자기관리 유도
-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상세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연 1회 총액과 건수만 공개하던 업무추진비를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도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상세 공개 권고
-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운영 및 A/S 실시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청렴우수 기관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참여 유도

별첨

「부패근절 종합대책」 세부추진일정

단위사업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윤리생활백과 제작·활용	자료수집		제작·배포				지속적 업데이트					
반부패 정보포털 구축	시스템 구축			정보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감사관 조직개편							시행					
감사전문인 제도도입	공개모집		평가									
감사매뉴얼 및 감사사례집 제작	감사관련 자료 수집·정리					매뉴얼·사례집 작성 및 배포						

2. 시민참여 감사 확대

① 시민참여 옴부즈만 제도 도입

② 시민감사관 권한 및 독립성 강화

③ 시민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1 「시민참여 옴부즈만」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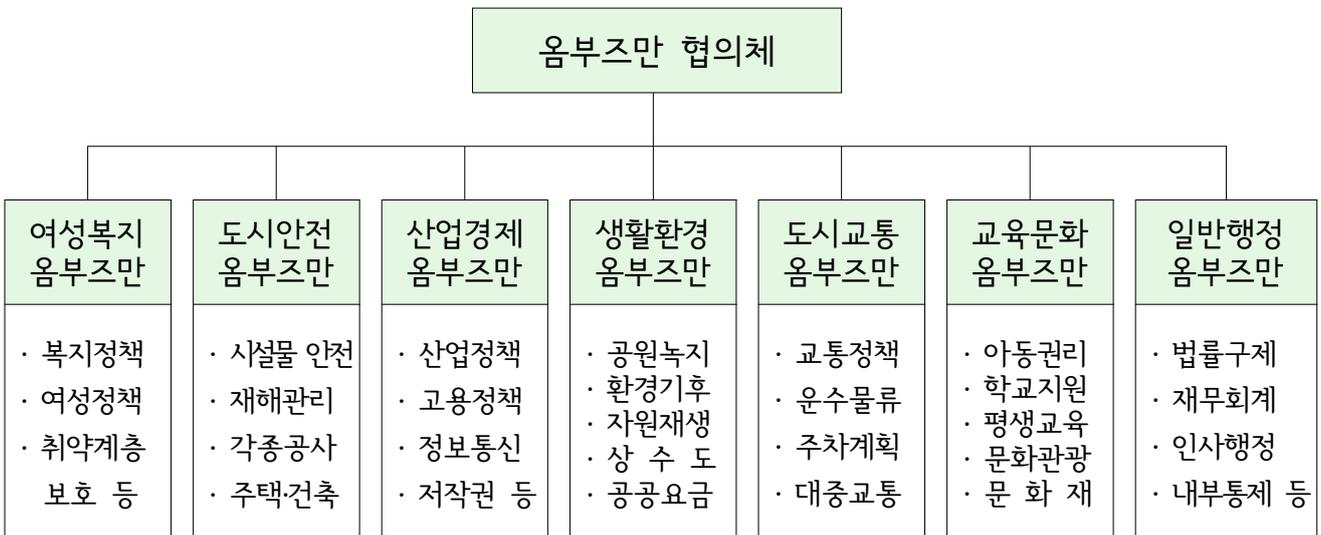
- ◆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주요 감사활동 참여 및 정책제언
- ◆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감사 참여 및 지원으로 감사품질 제고

□ 추진배경

-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중심 감사로의 패러다임 전환
- 전문화, 고도화된 비리 및 부패근절을 위해 전문적 감사 인력 필요

□ 운영계획

- 구 성 : 7개 분야 시민 35명 위촉(인력풀 형태)
 - 학계·법조계·협회·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
- 주요기능 및 권한
 - 주요 감사·조사활동 참여(합동점검 등 병행) 및 청렴계약 이행 입회·감시
 -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시정 참여 및 자문
- 운영체계
 - 시민감사관과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 7개 분야 시민감사관이 분과위원장을 겸임(위원장 : 대표 시민감사관)



2 시민감사관 권한 및 독립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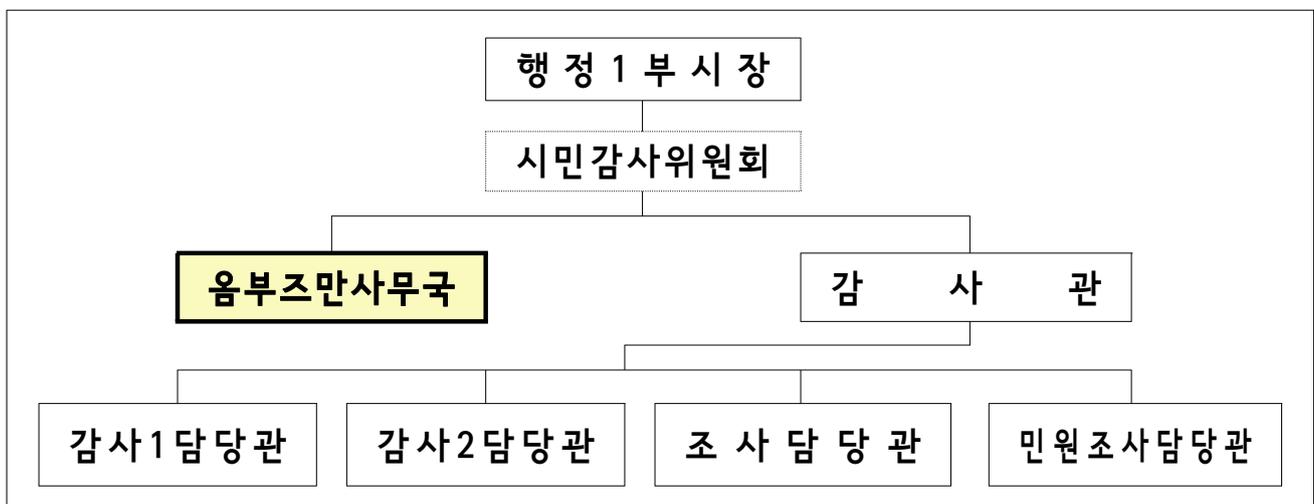
- ◆ 시민감사관 권한 확대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과 함께 감사 수행
- ◆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감사관 소속에서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소속 변경

□ 추진배경

- 감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및 권한확대 필요
-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강화 및 고도의 전문성 요구

□ 운영계획

- 시민감사관 운영의 독립성 강화 : 감사관 소속 → 행정1부시장 직속
-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 보장 등 권한강화
 - 인원 확충 : 5개 분야(토목, 건축, 환경, 일반행정, 재무) 5명 → 7개 분야 7명
 - 대표 시민감사관 근무형태 개선 : 비상근 → 상근(계약직 국장급)
 - 감사관과 시민감사관은 수평적 지원 및 협조관계
- 옴부즈만 사무국 신설 : 시민감사관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지원
- 시민감사 청구사항의 청구인 수 완화 : 현행 100명 → 50명



3 시민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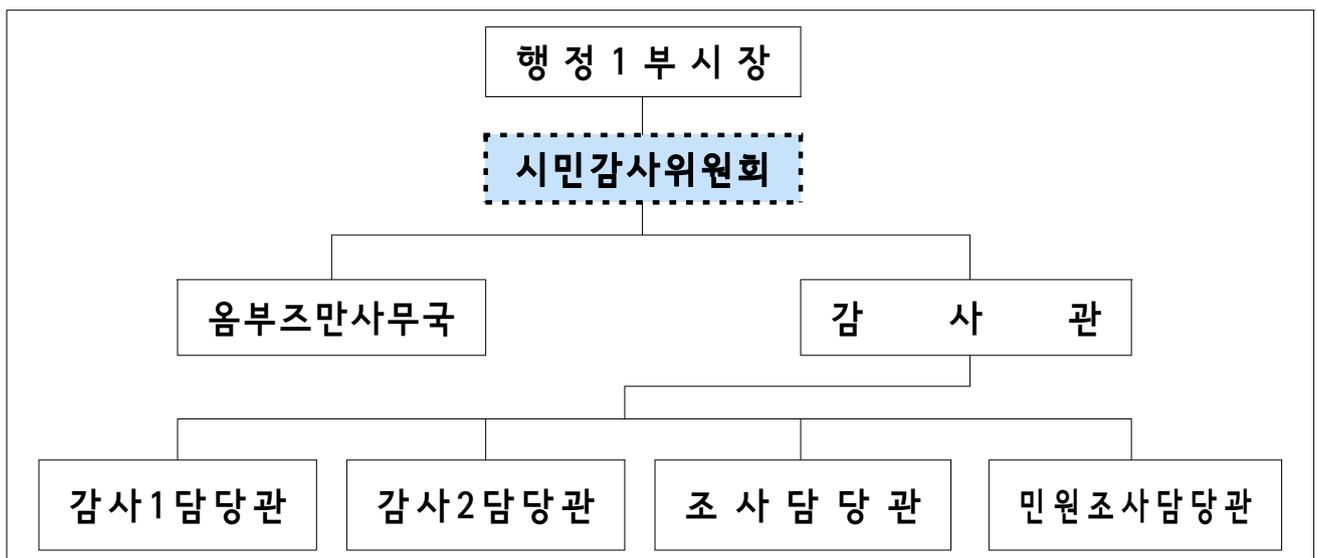
- ◆ 감사의 독립성·합리성 제고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제 운영
-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

□ 추진배경

- 감사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정성, 투명성 요구 증대
- 고도의 전문화 추세에 따른 전문적 지식 및 합리적 판단 필요

□ 운영계획

- 감사정책 및 대상 등 주요결정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 대 상 : 감사기본계획 수립 및 징계요구, 변상명령 등 주요 감사결과 심의
- 시민을 대변하는 법률, 회계, 세무, 감사 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 ※ 구체적인 권한·임무는 이후 조례 제정시 반영



※ 시민감사위원회는 상설 집행기구가 아니라 비상설 심의·자문기구이나, 투명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조직도상 감사관 상위에 위치

3.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① 취약분야 집중감사 실시

②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③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심사 강화

1 **취약분야 집중감사 실시**

-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연중 상시 감사체계 구축
- ◆ 복지 분야 등 주요시책 감사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농수산물공사 등에서 잇따른 비리 발생
- 실질적인 비리근절을 위해 상시 감사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본청 및 사업소 : 산하기관 관리감독 실태 등 중점 감사**
 - 본 청 :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지원단체 관리감독 실태
 - 사업소 : 예산·회계, 공사계약,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등 기관운영 전반
-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교부단체 : 전담 감사부서 신설**
 - 투자·출연기관 인사·조직운영 등 경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전담 감사
 - 투자·출연기관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진단 연구용역 추진
- **복지분야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사 강화**
 - 횡령,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는 예산낭비요인 적발·개선
 - 건축, 주택, 세무, 위생 등 시민생활 밀접분야 감사활동 강화
 -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25개 자치구와의 합동감사 및 교차감사 추진
- **지방세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 징수관련 감사 강화**
 - '11.12월 5개구 조사결과 시세 부당 결손처분 11건 8억 8,664만원 적발
 - * 5개구 : 용산, 마포, 노원, 광진, 서초
 -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부와 누락 시정

2012년 월별 감사계획

■ 총 25개 분야 : 종합감사 12, 특정 12, 성과 1 - 58개 기관 (부서)

월별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사업)	비 고
1월	특 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경제진흥본부 등 16개 기관(부서)	
	종 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디자인재단	
2월	종 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여성가족재단	
	종 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문화재단	
	특 정	해빙기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3월	종 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신용보증재단	
	종 합	기관운영(투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서울복지재단	
	특 정	복개구조물 및 소교량 안전감사	남부·성동·강서도로사업소	
4월	종 합	기관운영(지방공기업) 종합감사	도시철도공사	
	특 정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금천구·노원구	
	종 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역사박물관	
5월	종 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인재개발원	
	종 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특 정	투자기관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6월	종 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국(사업비집행)	
	특 정	식품위생 등 취약분야 관리실태	종로구·동대문구	
7월	종 합	기관운영(소방서) 종합감사	영등포·강동소방서	
	종 합	기관운영(사업소) 종합감사	서남·탄천물재생센터	
9월	특 정	시비보조금 집행 운영실태	사회복지관 등 6개 시설	
	특 정	자치구 주택·건축 집행실태	강서구·서대문구	
10월	특 정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중구·강남구	
	특 정	자치구 도시계획 운용실태	용산구·성동구	
	특 정	한강교량 안전감사	도시안전실	
11월	성 과	일자리정책분야	일자리정책과 등 해당부서	
	특 정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안전감사	복지건강실	

2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시정 관련 동향 파악 보고로 지휘체계 확립 및 원활한 조직운영 지원
- ◆ 복무실태 감찰 및 특별점검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배경

- 2012년 총선 및 대선 실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우려
- 엄정한 감찰활동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공직풍토 조성

□ 추진계획

- 기관 및 주요 시정에 대한 동향보고로 원활한 조직운영 지원
 - 시책사업, 산하기관, 직원인사 여론 등 시정전반에 대한 동향보고 철저
 - 감사원, 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대응
 - 시장님 공약사항 등 주요시책·사업 상시 모니터링 및 대안 제시
- 취약인물·부서·업무에 대한 상시 직무감찰 활동 강화
 - 상시 비노출 기강감찰팀을 중심으로 금품·향응수수, 인사이권청탁 등 부패 행위에 대한 상시 직무감찰 실시
 - 복지분야 등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한 공직자 비위행위 집중 감찰
- 양대 선거 및 취약시기 특별 공직기강 감찰로 근무기강 확립
 - 개인정보, 대외보안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특별 감찰
 -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교육 강화
 - 복지부동, 무사안일, 근무태만, 특정한 비방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엄중 문책

3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심사 강화

- ◆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직윤리 확립 위해 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 ◆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강화

□ 운영개요

○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 11명(외부위원 7명, 시의원 2명, 내부위원 2명)
- 심사내용 : 재산등록 심사·결과처리, 고지거부 허가 및 취업심사

○ 재산등록 및 심사대상

- 서울시 등록대상 : 4,958명('11.12.31 기준)
 - 시 4급 이상 364, 특정부서 7급 이상 4,437, 시의원 112, 유관단체장 및 임원 45
 - 서울시 심사대상 : 5,358명('11.12.31 기준)
 - 시·자치구 4급 이상 460, 특정부서 7급 이상 4,437, 구의원 416, 유관단체장 및 임원 45
- ※ 재산등록 대상중 정무직, 시의원, 3급 이상(시립대 포함)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2011년 추진실적

-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7회, 안건 21건 5,964명 심사
 - 조치인원 : 784명(보완명령 569, 시정·경고 212, 과태료 부과 3)
- 고지거부 허가 : 668명 심사(허가 495, 불허 173)
- 취업현황 조사 : 829명 조사(임의취업자 5명 주의촉구 조치)

□ 추진계획

○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형성과정 등 심사 강화(연 8회 운영)

- 재산취득·보유경위·소득원·자금흐름 등 재산형성과정 중점 심사
- 직무상 비밀·영향력 등을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심사자료 요구 및 확인

○ 고지거부 신청자 심사(기존 '09.1.1~'12.12.30까지 허가자 재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연 2회(상·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4. 시민고충민원 적극 해소

① 고충민원 및 생활불편 신고민원 처리 철저

② 시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감사

1 고충민원 및 생활불편 신고민원 처리 철저

- ◆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고충민원 적극 처리
- ◆ 시민 생활불편 신고민원 시정여부에 대해 사후 확인 철저

□ 주요내용

-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고충민원 접수처리
 - 고충민원 직접조사 : 시민고객의 권리구제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요구
 - 서울시민과의 대화 : 시정현안·주민숙원사업관련 시장님 또는 실·국장 대화요청
 - 민원배심법정 :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가(배심원)가 참여하여 고질민원 처리
-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민생활불편사항 접수처리
 - 시민불편 살피미 제도 운영

2011년 추진실적

- 직접조사 : 263건(5,797건 접수, 경미한 민원사항 5,534건 이송·이첩)
- 서울시민과의 대화 : 164건 접수(시장 면담 14, 市간부 면담 55, 기타 95)
- 민원배심법정 : 10건 접수(인용 4, 일부인용 3, 기각 2, 취하 1)
- 시민불편 살피미 : 생활불편 민원(458,706건)의 시정 여부 점검

□ 추진계획

- 장기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배심법정 운영 활성화
 - 배심원을 기존 3~4명(변호사·학계 등)에서 前 시장님 등 명망인사, 시민참여 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9~10명으로 확대
- 매월 1회 (가칭)“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운영
 - 시정 주요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민원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시민과의 대화」를 (가칭)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로 정례화
-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점검 추진(상·하반기)

2 시민과 함께 하는 하도급 감사

- ◆ 정비된 「하도급 개선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 및 시민중심 감사 강화
- ◆ 실효성 확보위해 시정명령·과태료부과입찰제한 등 강력한 조치

□ 추진배경

- 저가하도급 등 잔존하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 필요
- 현장기동점검, 민·관 합동감사 등 하도급 개선의 실효성 확보

2011년 추진실적

- 하도급조례 제정('11.10.27) 및 市 발주 하도급공사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개선시스템」 정비
- 30개 기관 1,174건 하도급공사 전수조사 실시, 제도개선 15건
- 부조리 신고센터 151건 접수 139건 처리 완료(처리율 92%, 27억원)

□ 추진계획

- 현장 기동점검 실시(상·하반기)
 - 대형공사장 및 민원 다수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실시
 - 저가하도급, 일괄재하도급 등 관행적 불공정 행위 근절
- 민·관 합동감사 실시(하반기)
 - 시민참여 ombudsman이 감사공무원과 함께 하도급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및 감사의 투명성 확보
- 신고민원 특별조사제 도입(수시)
 -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악성·고질적 민원 직접 조사
 - 민원해결 우수사례 전파 및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 부조리 재발 방지

5. 안전사고 및 재난대책의 실효성 제고

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안전감사

② 수해·폭설 등 재해 및 시민이용시설 예방점검

1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안전감사

- ◆ 주요 도시시설물 예방감사로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 사전해소
- ◆ 재난발생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후진적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주요내용

-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도시시설물 위주 안전감사 실시
- 주요시설물(교량·터널·지하철역 등)에 대한 소관기관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 市 관리 주요시설물 : 1,872개소
 - D·E 등급의 공공·민간시설물 : 205개소

2011년 추진실적 : 총 8회 안전감사·점검 실시 833건 시정조치

- ◆ 자동차전용도로 등 도시시설물(185개소) 안전관리실태 감사·점검 5회
 - 교량받침 부식, 도로 파손 등 위험요소 543건 시정
-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대형공사장(137개소) 안전관리실태 감사·점검 3회
 - 복공판 하부 강재이음 부적정, 보행통로 미확보 등 290건 시정

□ 추진계획

- 시설물별 세부 안전감사계획 수립 및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전문감사 실시
- 소관기관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이행실태 중점점검
 - 시설물의 붕괴·화재 등 재난 대비 위기대응능력 및 시설물 관리실태

2 수해·폭설 등 재해 및 시민이용시설 예방 점검

- ◆ 수해·폭설 등 각종 재해 대비 사전 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 ◆ 시민이용시설 예방점검으로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 주요내용

- 수해·폭설 등 재해 준비실태 사전 점검으로 대응능력 향상
- 계절별·테마별 등 시민이용시설 예방점검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2011년 추진실적 : 총 8회 점검 실시 1,614건 시정조치

-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 수방시설 및 하천내 공사장 관리소홀 등 323건 시정
- 폭설 대비실태 점검
 - 제설자재·장비 관리, 사전준비 소홀 등 113건 시정
- 공원·간선도로·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어린이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 추진계획

- 수방·제설 준비실태 사전 예방점검 및 재해발생시 상시 점검반 편성
 - 수해('12.6.15~10.15)·폭설('12.11.15~'13.3.15) 취약시기 도래전 장비가동 실태·자재비축, 근무인력 배치 등 준비실태 사전점검
 - 상황발생시 1시간이내 취약지역 출장 복구작업 독려 상시 점검반 35명 운영
-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계절별·테마별 예방점검 실시
 - 주요 대형공원 및 어린이 공원, 지하철 역사, 각종 행사장 등

2012년도 월별 조사 및 점검계획

■ 총 10개 분야 : 25개 자치구 및 700개 시민이용시설

월별	구 분	감 사 사 항	대 상 기 관(사업)	비 고
2월	조 사	시세 결손처분 실태조사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4월	점 검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실태 점검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50개소	
5월	점 검	봄철 공원관리실태 점검	주요 공원 20개소	
6월	점 검	수해 산사태 대책 점검	빗물펌프장, 공사장 등 500개소	
7월	점 검	수영장 수질관리 등 운영실태 점검	한강공원수영장 등 30개소	
8월	점 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지하철역사 등 70개소	
10월	점 검	시민참여 행사장 점검	각종 행사장 등 10개소	
11월	점 검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등	
12월	조 사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 조사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점 검	화재 취약시설 점검	쪽방촌, 노인이용시설 등 20개소	